

2025학년도 11월 정경대학 다람쥐 모의평가 문제지

사회탐구 영역

- 4쪽이 모두 인쇄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 문제지의 해당란에 성명과 수험번호를 정확히 쓰시오.
- 답안지의 필적 확인란에 다음의 문구를 정자로 기재하십시오.

땅을 뚫고 나와 새싹이 되기까지

- 답안지의 해당란에 성명과 수험번호를 쓰고, 또 수험번호와 답을 정확히 표시하십시오.
- 문항에 따라 배점이 다릅니다. 3점 문항에는 점수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점수 표시가 없는 문항은 모두 2점입니다.
- 모의평가를 모두 푸신 후, 배포한 게시글에 있는 링크를 통해 설문에 참여해주시는 것은 매년 모의고사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매년 양질의 시험지를 무료로 배포하기 위함이니 후배들을 위해서라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해당 모의고사를 위해 힘써주신 출제진 및 검토진의 이름은 다음 쪽 표지에 기재하였습니다.
- 해당 문제지는 저자의 창작물로, 학교, 학원 등에서 학습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외의 용도(판매, 불법 복제 후 도용 등)로 사용하는 경우 법적 조치를 다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정치와 법 1, 2, 3, 4 쪽

※ 감독관의 안내가 있을 때까지 표지를 넘기지 마시오.

출제진 및 검토진

출제진

윤준수(한국교원대학교 일반사회교육과)

김호진

검토진

김근영(한국교원대학교 일반사회교육과)

남우현(한국외국어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유채연

이태민(한국외국어대학교 경제학과)

정성욱(한국교원대학교 일반사회교육과)

필적 확인란 문구 출처(원작자의 허락을 얻어 사용하였습니다.)

<https://blog.naver.com/whatuwant20/223148100230>

제 4 교시

사회탐구 영역(정치와 법)

성명 수험번호 - 제 () 선택

1. 정치를 바라보는 갑, 을의 관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갑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구성원 간의 대립과 갈등을 조정하여 해결해 나가는 모든 활동을 정치라고 생각해. 우리가 학급 회의에서 국회에 법률의 제정을 건의할 내용을 정하기 위해 토의하는 것을 예로 들 수 있어.

을 내 생각은 너와 달라. 국회에서 법률을 제정하고 예산안을 심의·의결하는 것과 같이 국가 고유의 활동만을 정치로 볼 수 있어.

- ① 갑의 관점은 사회 집단 내에서 권력이 형성·분배되는 과정을 정치라고 보지 않는다.
- ② 을의 관점은 지방 의회 의원을 선출하는 과정을 정치라고 본다.
- ③ 을과 달리 갑의 관점은 정치가 국가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기능을 한다고 본다.
- ④ 갑에 비해 을의 관점은 정치의 주체가 다양하다고 본다.
- ⑤ 갑과 을의 관점 모두 국가 형성 이전의 정치 현상을 설명하기에 용이하다.

2. 법치주의의 유형 A, B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법치주의의 구체적인 의미와 실현 방식은 다른 양상으로 이해될 수 있다. 국가 질서 유지를 위해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를 상정해 보자. 이러한 법률이 의회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제정되었다면 A의 측면에서는 그 자체로 정당하지만, B의 측면에서는 정당한 범으로서의 충분조건 중 일부만을 충족한 것이다. B는 헌법 이념에 부합하는 내용이 담긴 법에 따른 통치만을 진정한 법치(法治)로 이해하기 때문이다.

- ① A는 정의에 부합하는 통치는 법률에 근거하지 않아도 된다고 본다.
- ② B는 입법자에 의한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간과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 ③ A와 달리 B는 입법자의 권한을 제한할 수 있는 헌법상 원칙의 필요성을 경시한다.
- ④ B와 달리 A는 입법 작용과 달리 행정 작용은 법률에 근거를 두어야 한다고 본다.
- ⑤ A와 B 모두 법률이 정당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제정 절차의 합법성이 충족되어야 한다고 본다.

3.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 원리 A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A는 통일 이전 남북 간 문화 교류를 활성화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으며, 통일 이후에는 사회 통합을 촉진하는 헌법적 원리로 기능할 가능성이 크다.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민족 문화 공동체의 형성과 전통문화의 계승에 중점을 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접근은 남북 간의 문화적 공통점을 강화하고, 통일 이후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며, 통합된 국가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 ① 국가가 국민의 문화 활동을 보장하고 지원하는 근거가 된다.
- ② 실질적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사회 보장 제도 실시의 근거가 된다.
- ③ 분단 국가라는 상황을 전제로 한 우리나라의 특유한 헌법 원리이다.
- ④ 국민이 국민 투표를 통해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 ⑤ 국가가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4. 정치 참여 집단 A~C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C는 각각 시민 단체, 이익 집단, 정당 중 하나임.)

교사 지난 시간에 배운 정치 참여 집단 A~C의 활동에 대하여 사전에 조사한 내용을 발표해 볼까요?

A의 활동으로는 범죄에 연루된 국회의원을 차기 선거의 공천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을 들 수 있어요.

B의 활동으로는 ○○시 병원을 강제 철거하려고 하자 ○○시의 공익을 위해 철거 반대 시위를 진행한 것을 들 수 있어요.

C의 활동으로는 ○○시에 새롭게 건설된 아파트 입주 시점이 연기되자 입주 예정자 단체가 입주 지연에 따른 피해를 보상받기 위한 시위를 진행한 것을 들 수 있어요.

- ① A는 국민의 의사를 수용하여 법률을 제정한다.
- ② B는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고 정치적 책임을 진다.
- ③ C는 정치 과정에서 여론 형성 기능을 수행하지 않는다.
- ④ '정책을 집행하는 공식적 정책 결정 기구인가?'라는 질문으로 A와 B를 구분할 수 없다.
- ⑤ '정부 정책에 대한 감시와 비판 기능을 수행하는가?'라는 질문으로 B와 C를 구분할 수 있다.

5.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 및 추론으로 옳은 것은? [3점]

갑국은 모든 시기에 전형적인 정부 형태를 채택하고 있다. t~t+3시기 중 갑국의 정부 형태는 1회 변경되었고, t시기 정부 형태는 직전 시기의 정부 형태와 동일하며, 각 시기의 정부 형태는 해당 시기 내에서 동일하다. t시기에 행정부 수반 소속 정당은 A당이고 과반 의석을 확보한 정당이 존재한다. 다음은 t+1~t+3시기 갑국의 정치 상황을 나타낸다.

구분	t+1시기	t+2시기	t+3시기
의회 제1당	A당	B당	C당
의회 제1당 과반 의석 여부	○	×	○
직전 시기 대비 행정부 수반 소속 정당 변화 여부	변화함	변화 없음	변화 없음

* 모든 시기에 무소속 의원은 없고 행정부 수반은 소속된 정당이 있으며, 각 시기 내 정당별 의회 의석을 변화와 행정부 수반의 소속 정당 변화는 없음.

- ① t시기에 과반 의석을 확보한 정당이 B당이라면, t+3시기 행정부 수반 소속 정당은 B당일 것이다.
- ② t+3시기에 의회 의원이 각료를 겸직할 수 없다면, t시기 제1당은 B당일 수 있다.
- ③ t시기와 달리 t+1시기에 행정부 수반이 법률안 거부권을 가진다면, t+3시기에 행정부 수반은 국가 원수와 다른 인물이다.
- ④ t시기와 t+2시기의 정부 형태가 동일하다면, t+3시기에 C당은 단독으로 내각을 구성할 수 있다.
- ⑤ t+1시기와 t+3시기에 정부 형태가 동일하다면, t시기와 t+1시기의 의회 제1당이 동일할 수 없다.

2 (정치와 법)

사회탐구 영역

6.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 B는 각각 지방의회, 지방 자치 단체의 장 중 하나임.)

○○시 행정 사무의 총괄을 담당하는 A는 B의 의정 활동이 타 지역에 비해 매우 적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논의하기 위해 B에게 간담회를 요청하였다. 이에 대해 ○○시 주민들은 B의 충실한 의정 활동을 위해 입법 역량 강화를 비롯한 의정비 지출 대비 효율성 평가 등의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법의 개정과 ㉡주민 소환 제도의 필요성을 함께 강조하고 있다.

- ① ㉠은 A의 행정 사무의 처리가 ㉡에 위반될 때, 주민이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이다.
- ② A는 ㉠에 대해 재의를 요구할 수는 없으나, ㉠의 개정안을 제출할 수 있다.
- ③ B는 ㉠의 내용을 개정할 권한이 없지만, ㉡에 위배되는 내용의 조례안을 제정할 수 있다.
- ④ A와 달리 B의 구성원 중 일부는 주민의 선거로 선출되지 않는다.
- ⑤ B와 달리 A는 지방 자치 단체의 사무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는 권한을 가진다.

7.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 및 추론으로 옳은 것은? [3점]

갑(21세)은 을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된 상태에서 수사를 받았으나, 이후 병에 의해 불구속 기소되었다. 국민 참여 재판으로 진행된 1심 재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갑은 해당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2심 법원은 원심 판결을 유지하였다.

- ① 갑은 구속되기 이전 법원에 구속 적부 심사를 청구하여 구속 영장의 필요성과 적법성을 대면으로 심사받았을 것이다.
- ② 1심 법원은 배심원의 유죄 평결에 구속되어 유죄 판결을 하였다.
- ③ 1심 재판은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국민 참여 재판으로 진행되었다.
- ④ 갑은 2심 판결에 불복하여 명령의 위헌·위법성을 최종 심사하는 대법원에 재항고를 할 수 있다.
- ⑤ 갑에 대한 2심 판결이 확정된 경우 을은 범죄 피해자 구조 제도를 통해 갑에게 범죄 피해에 대한 배상을 받을 수 있다.

8. 민법의 기본 원칙 A에 대한 진술로 가장 적절한 것은?

소유권을 가진 개인은 해당 재산에 대한 처분을 위하여 계약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의 합치로 법률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그러나 착오와 같이 법률관계 형성을 위한 의사 표시가 실제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존재한다. 이 경우 사적 자치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A에 근거하여 해당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 ① 개인은 자유로운 의사에 기초하여 타인과 법률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 ② 개인의 소유권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권리이다.
- ③ 고의 또는 과실의 여부와 관계없는 연대 책임을 방지하기 위해 등장하였다.
- ④ 반사회적이거나 현저히 불공정한 내용의 계약을 무효로 하는 근거가 된다.
- ⑤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법률로 정해진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책임을 질 수 있다.

9. 헌법 재판의 유형 (가)~(다)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HOME > 연재 > ○○○의 헌법 교실

헌법 재판소가 관장하는 재판을 알아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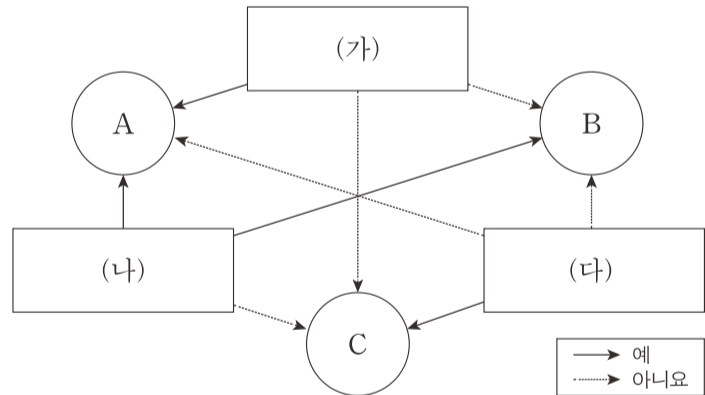
- (가) 은/는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어긋나는지를 판단하는 헌법 재판이다.
- (나) 은/는 공권력의 작용으로 인해 기본권을 침해당한 국민이 청구하는 헌법 재판이다.
- (다) 은/는 당해 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 해당 소송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의 제청에 의해 해당 법률의 위헌 여부를 결정하는 헌법 재판이다.

<보 기>

- ㄱ. 정부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만 (가)를 제소할 수 있다.
- ㄴ. (나)는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청구할 수 없다.
- ㄷ. 법원은 재판 당사자의 (다) 제청 신청을 기각 결정할 수 있으며, 재판 당사자는 해당 결정에 불복하여 항고할 수 있다.
- ㄹ. (나)와 달리 (다)는 다른 법률에 구체 절차가 있는 경우 해당 절차를 모두 거쳐야만 청구할 수 있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0. 그림은 (가)~(다) 질문에 따라 우리나라 헌법 기관 A~C를 구분한 것이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단, A~C는 각각 국무총리, 국회, 대통령 중 하나임.) [3점]



- ① A가 대통령이라면, (나)에 '국민으로부터 직접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는가?'와 (다)에 '국무회의의 구성원인가?'가 동시에 들어갈 수 있다.
- ② (가)에 '대법원장 임명 동의권을 가지고 있는가?'가 들어가면, (나)에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을 국민 투표에 부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가?'가 들어갈 수 있다.
- ③ (나)에 '국무 위원에 대한 해임 건의권을 가지고 있는가?'가 들어가면, (다)에 '헌법 재판소 재판관 임명권을 가지는가?'가 들어갈 수 있다.
- ④ (가)에 '입법 사항에 관한 조약을 체결·비준하는가?'가 들어가고, (나)에 '헌법상 임기가 보장되는가?'가 들어가면, B의 A, C에 대한 견제 수단으로 탄핵 심판권을 들 수 있다.
- ⑤ (가)에 '국정 전반에 대하여 감사권을 가지는가?'가 들어가고 (다)에 '재직 중 내란 혹은 외환죄 외로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가?'가 들어가면, A는 B에 대한 해임권을 가진다.

11.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3점]

갑은 카페를 운영하고자 을이 소유한 건물의 소유권을 일정한 날짜에 맞추어 이전받는 계약을 을(48세)과 체결하였다. 또한, 갑은 건물을 이전받기로 한 다음 날에 해당 건물의 리모델링을 위해 리모델링업장의 사장 병과 일정한 날짜에 맞추어 해당 건물의 리모델링을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갑은 을과 합의된 날짜에 소유권을 이전받았다. 그러나, 병이 리모델링을 위해 고용한 정(21세)이 작업 중 유리 창문을 파손하여 지나가던 행인 A를 다치게 하였고, 이로 인해 리모델링은 제시시간보다 늦게 완료되었다. 한편, 카페를 개업한 갑은 B가 주문한 음료를 배달할 것을 자신이 고용한 무에게 지시하였다. 음료 배달을 위해 카페를 나선 무는 갑의 카페 간판이 떨어져 전치 4주의 부상을 입었으며, 이로 인해 B는 제 시간에 음료를 배달받지 못해 자신이 진행 하던 간담회 진행에 차질을 빚었다.

- ① 정의 과실로 인해 갑과 병 간의 계약을 온전히 이행하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갑은 정에게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정이 A에게 불법 행위 책임을 지는 경우 병은 정의 사용자로서 A에게 특수 불법 행위 책임을 지지 않는다.
- ③ 갑이 간판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다하였음이 증명된 경우에도 을은 무에게 무과실 책임을 지지 않는다.
- ④ 갑이 간판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다하였음이 증명되지 않은 경우 무에게 사용자 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
- ⑤ 무는 자신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음료를 배달하지 못하였으나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였으므로, 무는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B에게 손해 배상을 책임을 진다.

12.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3점]

대학생 갑(24세)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일자리를 알아보던 중 매주 토요일, 일요일에 17시부터 23시(휴게 시간 18~19시)까지 법정 최저임금을 받고 근무할 사람을 구인하는 ○○ 대형 마트의 공고를 확인하였다. 이에 갑은 ○○ 대형 마트에 방문하여 사용자 을과 공고와 같은 내용의 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갑은 ○○ 대형 마트 노동자들이 최저 임금을 받고 근로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고, 적정 임금 보장을 위해 노동조합을 결성하였다. 이후 노동조합은 사용자 을에게 기본급 인상을 요구하며 수차례 교섭을 진행하였으나 성과를 내지 못하였고, 이에 해당 노동조합은 적법한 쟁의 행위를 시작하였다. 그 후, 을은 갑에게 해고를 통보하였는데, 갑은 해고 사유와 절차 모두 부당하다며 △△ 지방 노동 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하였다. △△ 지방 노동 위원회는 갑에 대한 해고의 절차가 부적법하다는 사실은 인정하였으나 갑의 근로 3권을 침해하기 위한 목적의 해고는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 지방 노동 위원회의 판정에 불복한 갑과 을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중앙 노동 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갑의 신청만 기각되었다.

- ① 갑과 을이 체결한 근로 계약 내용은 근로 기준법에 위반된다.
- ② 갑이 조직한 노동조합과 을 간의 단체 교섭에서 을이 노동조합의 요구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것은 부당 노동 행위에 해당한다.
- ③ 갑에 대한 해고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을 위반한 행위인지에 대해 △△ 지방 노동 위원회와 중앙 노동 위원회의 판단은 동일하다.
- ④ 갑이 중앙 노동 위원회의 재심 판정에 대해 불복하여 행정 소송을 제기한다면, 중앙 노동 위원회의 결정 효력은 상실된다.
- ⑤ 갑은 중앙 노동 위원회 재심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다면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소를 제기할 수 없다.

13. 국제 연합의 주요 기관 A~C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갑국은 을국과의 영토 분쟁 과정에서 국제법 위반 혐의로 A에 제소되었다. A는 갑국에 대해 잠정적 조치를 취하는 내용의 판결을 하였으나, 갑국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을국은 B에 갑국의 조치 불이행에 대한 대응을 요청하였고, B는 해당 분쟁이 국제 평화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하여 제재 결의안을 상정하였으나, 해당 결의안은 부결되어 채택되지 못하였다. 이후 모든 회원국으로 구성되는 C는 갑국과 을국 간 분쟁에 대한 권고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 ① A의 재판에서 국제기구는 재판의 당사자 자격을 갖추지 못한다.
- ② B의 일부 국가는 대륙별 안배를 고려하여 A에서 선출된다.
- ③ C는 최고 의결 기관으로 국제 평화에 일차적 책임을 진다.
- ④ B와 달리 A는 국제법을 위반한 국가에 대하여 경제적 제재를 결정할 수 있다.
- ⑤ B의 의결 과정과 달리 C의 의결 과정에서는 국제 관계를 바라보는 현실주의적 관점을 확인할 수 있다.

[14~15] 다음 자료를 보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갑(17세)은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을(23세)이 30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게시한 무선 이어폰을 발견하고 이를 ㉠ 구매하겠다고 생각하였다. 이후 갑은 을에게 해당 이어폰을 20만 원에 구매하겠다고 제안하였지만 을은 이를 거부하였다. 그 후, 갑은 을에게 해당 이어폰을 25만 원에 구매하겠다고 제안하였으며, 을은 이를 수락하였다. 해당 계약 당시 갑은 자신의 유일한 법정 대리인인 A의 동의를 얻지 않았다. 한편, 갑은 을로부터 구매한 이어폰을 배송받았는데, 배송을 받은 직후 을이 이어폰의 브랜드를 속여 가격을 높게 제시하였음을 알게 되었다. 이에 화가 난 갑은 자신의 친구 병(17세)에게 망을 보도록 한 후 단독으로 을을 폭행하였으며, 을은 갑의 폭행으로부터 자신을 방위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갑을 폭행하여 경미한 부상을 입혔다. 갑과 을은 서로를 고소하였으며, 검사는 갑을 가정 법원 소년부로 송치한 반면, 을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한 후 불구속 기소하였다. 그러나 가정 법원 소년부는 갑에 대하여 소년법상 보호 처분으로는 개선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하였고, 이로 인해 갑은 형사 법원에서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다. 1심 법원에서 갑은 폭행 혐의에 대하여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며, 을은 1심 법원에서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 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14. 위 사례에 대한 옳은 법적 판단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보 기>—

ㄱ. ㉠은 무선 이어폰 매매 계약 체결을 위한 청약의 의사 표시이다.
 ㄴ. 을은 갑에게 계약 추진 여부에 대한 확답을 촉구할 수 없다.
 ㄷ. 갑은 을이 제시한 가격보다 저렴하게 구매하였으므로, 을의 사기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ㄹ. 을에 대한 갑과 병의 공동 불법 행위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A는 을에게 불법 행위 책임을 질 수 있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5. 위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 및 추론으로 옳은 것은? [3점]

- ① 갑과 을은 서로에 대하여 법원에 처벌을 구하는 의사 표시를 하였다.
- ② 가정 법원 소년부는 직접 갑을 형사 법원으로 송치하였을 것이다.
- ③ 1심 법원은 을의 사기 혐의와 달리 폭행 혐의는 위법성이 조각되어 범죄의 구성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을 것이다.
- ④ 갑과 을에 대한 1심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갑과 달리 을은 형사 보상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 ⑤ 갑은 을의 폭행 혐의에 대한 1심 법원의 무죄 판결에 대하여 항소 법원에 상소할 수 없다.

4 (정치와 법)

사회탐구 영역

16.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법적 판단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우리 헌법에는 자유형과 명예형, 재산형 등이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 형벌의 유형들은 범죄의 경중에 부합하는 형벌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죄형 법정주의의 파생 원칙 중 (가) 을/를 실현한다. 한편, 형벌과 달리 ㉡ 보안 처분은 범죄 이후에 범죄자에게 불리하게 제정되거나 개정된 보안 처분 관련 법률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의무적 근로를 부과함으로써 여가시간을 박탈하는 등 실질적으로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내용의 보안 처분의 경우에는 범죄 이후 범죄자에게 불리하게 제정되거나 개정된 보안 처분 관련 법률을 적용할 수 없다.

<보 기>
 가. (가)는 형식적 의미의 형법에만 적용되는 원칙이다.
 나. 사회봉사 명령은 소급효 금지의 원칙이 적용되는 ㉡이다.
 다. ㉠과 ㉡ 모두 집행 시에 적법 절차의 원리를 준수하여야 한다.

- ① 가 ② 나 ③ 가, 나 ④ 나, 다 ⑤ 가, 나, 다

17.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3점]

홀어머니 A를 두고 있는 갑은 A의 동의를 얻음으로써 을과 적법하게 법률혼을 할 수 있었다. 이후 갑과 을 사이에서 B와 C가 태어났다. 이후 갑은 을의 부정한 행위를 이유로 이혼하였으며, 갑은 19세인 B를, 을은 17세인 C를 양육하기로 결정하였다. 그 후 갑은 병과의 법률혼 관계를 해소한 정과 법률혼을 하였으며, 정은 C를 친양자로 입양하였다.

- ① 갑이 A에게 혼인의 동의를 받은 시점에서 갑은 민법상 성년으로 의제되었다.
- ② 원칙적으로 이혼에 책임이 있는 을은 갑이 혼인 전 단독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해 분할을 요구할 수 없다.
- ③ 갑과 을이 이혼한 시점에서 갑은 C에 대한 면접 교섭권을 가지고, 을은 B에 대한 면접 교섭권을 가진다.
- ④ 정이 C를 입양하였으므로, C는 출생한 때로 소급하여 갑과 정 의 혼인 중의 출생자로 간주된다.
- ⑤ 정이 유언 없이 사망한 경우 정 의 재산은 B와 C가 공동으로 상속받는다.

18. 국제 관계를 바라보는 갑, 을의 관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갑: 국제 사회에서 국가들은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경쟁합니다. 그러나 각국은 공동의 이익을 위해 협력할 수 있는 합리성도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제기구와 국제법을 통해 국가 간 협력을 제도화함으로써 평화로운 국제 질서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을: 국제 사회에서 각국은 자국의 안보와 생존을 위해 끊임없이 경쟁합니다. 이는 힘의 우위로 결정되는 국제 사회의 특징이 반영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 개별 국가는 자국의 국력 증진을 통해 국제 사회에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하는 것이 일반적인 양상입니다.

- ① 갑의 관점은 국제 사회에서 도덕적 규범의 영향력을 경시한다.
- ② 을의 관점은 보편적 선(善)을 추구하는 국제 규범의 실효성을 강조한다.
- ③ 갑의 관점과 달리 을의 관점은 국제 사회에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중앙 정부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본다.
- ④ 을의 관점과 달리 갑의 관점은 국제 평화 실현에 있어 집단 안보 체제의 역할을 중시한다.
- ⑤ 갑과 을의 관점은 모두 국제 사회에서 개별 국가의 이익과 국제 사회 전체의 이익이 조화될 수 있다고 본다.

19. 기본권 유형 A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헌법 이론의 발전과 함께 등장한 A는 자유와 권리 보장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제시하였다. A가 등장하기 이전에는 국가 권력이 사적 영역에 개입하지 않을 것이 요구되었다. 그러나 이로 인해 오히려 경제 영역에서의 불평등이 심화되었고,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하지 못해 실질적인 자유와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도 존재하였다. 이러한 계기로 탄생한 A는 국가와 개인 간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계기가 되었다.

- ① 국가의 정치 과정에 참여하는 능동적 권리이다.
- ②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을 요구하는 적극적 권리이다.
- ③ 다른 기본권 구제를 위해 행사하는 수단적 권리이다.
- ④ 다른 기본권 보장의 전제 조건이 되는 포괄적 권리이다.
- ⑤ 국가 권력에 의한 침해 배제를 배제할 수 있는 방어적 권리이다.

20.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 및 추론으로 옳은 것은? [3점]

갑국은 t시점에 대통령은 단순 다수제로, 의회 의원은 모두 비례 대표제로 선출하였다. 각 시점에서 갑국의 유권자(V1~V1,000) 1,000명은 변함이 없으며, 모든 유권자는 집단별로 자신의 정당 선호 순위를 고려하여 대통령 후보 1인과 의회 의원 선출을 위해 1개 정당에 투표한다. 대통령의 임기와 의회 의원의 임기는 각각 4년과 5년이며, 대통령 및 의회 의원 선거는 t시점에 동시에 진행되었고, 선거 결과 A~D당의 의석률은 정당 투표 득표율과 동일 하였다. <자료 1>은 t시점 대비 t+4년 시점의 집단별 정당 선호 순위 변화를 나타낸다. 예를 들어, V1~V200 집단의 A당 선호는 t시점 1순위(가장 선호도 높음)에서 t+4년 시점에 2순위로 변화한 것이다.

<자료 1> t시점 대비 t+4년 시점 집단별 정당 선호 순위 변화

구분	A당	B당	C당	D당
V1~V200	1→2	4→1	2→4	3→3
V201~V500	2→2	1→1	3→4	4→3
V501~V750	1→2	2→3	4→4	3→1
V751~V1,000	4→1	2→2	1→3	3→4

* 유권자 1인은 1표를 행사하고, 투표율은 100%이며, 무효표는 없음.
 한편, t+1년 시점에는 의회에서 t+4년 시점에 시행되는 대통령 선거 제도에 대하여 <1안>과 <2안>이 논의되었다. 두 개편안 중 t시점 유권자의 정당 선호 순위에 근거할 때 의회 제1당에서 대통령을 배출할 수 있는 개편안이 채택 되었다. <자료 2>는 t+1년 시점에 논의된 대통령 선거 제도 개편안이며 개편안과 t+4년 시점 대통령 선거 결과는 <자료 1>에만 근거하여 판단한다.

<자료 2> t+4년 시점 대통령 선거 제도 개편안

<1안>	1차 투표에서 과반을 득표한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득표수가 많은 상위 2인에 대해 결선 투표를 실시하여 더 많은 표를 얻은 1인이 당선된다.
<2안>	모든 유권자는 가장 선호하는 정당 소속 후보자에게 추천 투표를, 가장 선호하지 않는 정당 소속 후보자에게 비추천 투표를 한다. 추천 투표를 받은 후보자에게는 1표당 +1점을, 비추천 투표를 받은 후보자에게는 1표당 -1점을 부여한다. 이에 따라 점수를 산출하여 최종 점수가 가장 높은 1인이 당선된다.

** 대통령 선거에서 동률이 발생한 경우 의석률이 높은 정당의 후보자를 상위 순위로 함.

- ① t시점에 시행된 선거로 인해 여대야소 상황이 발생하였다.
- ② t+1년 시점에 대통령 선거 개편안으로 <2안>이 채택되었다.
- ③ t+4년 시점에 시행된 대통령 선거에서 A당 소속의 후보자가 당선 되었다.
- ④ <1안>에 따르면 대통령 당선인이 되기 위해서는 2회의 선거에서 모두 득표율 1위를 차지하여야 한다.
- ⑤ <2안>은 최종 점수가 음(-)의 값인 후보자가 당선될 수 없는 절대다수 대표제이다.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 하시오.

※ 감독관의 안내가 있을 때까지 표지를 넘기지 마시오.